

나주 82개 사회단체 'SRF 판결' 반발... "강력 대응할 것"

지난 15일 난방공사 승소 'SRF발전소 가동 임박'에 반발 "비성형 SRF' 발전설비의 차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판결"

법원 판결로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품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지자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나주 SRF 반대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

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인용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공대위는 '법

원이 발전소 건설 초기에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합의한 '성형 RDF' 방식과 이후 일방적으로 건설한 '비성형 SRF' 발전설비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SRF라고 하지만 사실상 쓰레기 원물에 가까운 폐기물 연료를 나주시로 전량 반출하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광주시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광주시는 당초 광주 생활쓰레기로 SRF를 제조해 나주열병합발전소로 전량 납품하는 광주 남구 양과동 전처리 시설(청정빛고을㈜)을 본인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밝혔지만,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조속한 시설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이기적인 행정 행위이자, 상생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광주시) 배출한 쓰레기를 단 1년도 자체 해결하지 않고, 힘없는 작은 지자체(나주시)에 모두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의 성지에서 말하는 '광주 정신'이냐"고 따졌다.

공대위는 나주 시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적으로 나주시가 즉각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SRF 시설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8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조만간 열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차량 시위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 광주 원정 집회와 양심 있는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광전노협 장재영 의장은 "이번 사안은 거대 광역도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권 쓰레기를 나주혁신도시에 떠넘기는 광주시의 처사를 볼 때 이미 상생은 물 건너갔다"며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명칭에서 '광주'를 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19일 나주시와 간담회를 하고, 21일에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도심 제한속도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아진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투기, 40대 청약통장 모집책 징유

위장전입하고 임신진단서 발급도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불법 투기와 위장전입을 일삼은 40대 청약통장 모집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필요한 청약통장·공인인

증서 등을 사들여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공모,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해왔다.

분양 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임의주자 모집공고에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거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 보유자의 통장을 사들였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임신부를 제외한 뒤 통장 명의자의 아내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 사회적 폐해가 크다. A씨가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103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72세 패륜아들 징역 10년

"지체 장애로 지내왔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고령의 어머니가 자신만 미워한다고 여겨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주거지에서 어머니 B(103)씨를 넘어뜨린 뒤 돌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슴 등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며 편애한다. 자신만 미워한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품어 왔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에게 욕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

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 고령인 어머니를 살해했다. 범행 경위에 비취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노모·동생과 함께 살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전 오염수 日부총리나 마셔라"...시민단체, 철회 촉구

"방류는 죽음의 재앙...반인륜적 도발" "동북아 국민 생명과 해안에 큰 피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환경

한 것은 전 인류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자 반인륜적 도발"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염수 방류는 동북아 주변국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해안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아소 부총리가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소 부총리 당선이나 실컷 마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즉각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서한문을 일본대사관 우편함에 전달했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